

더 불 어 민 주 당 탄소중립위원회	보도자료 (토론회 중심) 12월9일(금) 즉시	김정호 위원장 양이원영 부위원장 * 이정환 보좌관 010-5415-4185
--	--	--

민주당 탄소중립특, 윤석열정부 에너지정책 평가 나서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민주당, 탄소중립특 상설위원회로 격상시켜 기후위기대응 본격화

민주당·전문가 “에너지는 진보·보수 이념이 아닌 국가경제 존폐의 문제”

RE100, 녹색금융, 내연차 퇴출, 자원순환, 노동전환 등 10대 중점과제(시그니처) 제시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 양이원영 의원)가 8일(목)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당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에너지는 진보·보수 이념이 아닌 국가경제 존폐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직결된다.”면서 “국제적으로 탈탄소 무역규범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에너지정책은 글로벌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에너지 위기시대,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현행 전기요금은 복지정책과 달리 소득역진성 강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할인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강조하면서 “전기·가스는 공공재가 아닌 희소한 시장재이기에 시장경쟁 도입과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와 송전망 과제’ 주제발표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위한 지역 송전망 확충을 통해 전력 수요 분산과 에너지고속도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기판매사업 개방, 전기·가스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 제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그린빅뱅과 그린몬스터’라는 색다른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세계는 지금 그린산업 빅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선진국과 재생에너지 격차가 커질수록, 더욱더 높아지는 국제 그린장벽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 IRA와 같이 그린산업·일자리 확대 위한 그린부양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부위원장 겸 에너지분과위원장은 “사람들은 전기가 공공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공공재는 누가 많이 쓰거나 누가 비용을 적게 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적게 쓰거나 비용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뒤 “그런 측면에서 전기는 공공재가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시장재이기에 요금이 원가 이하가 되면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탄중위는 이날 RE100, 에너지전환, 저탄소산업, 녹색금융, 내연차, 녹색건축, 농업태양광, 자원순환, 노동전환, 상생협력 등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을 점검하고 그 대안으로서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정호 위원장은 출범 선언에서 재생·그린수소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현, 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수송·건축 녹색전환, 탄소흡수원 기능 제고, 산업·노동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7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10대 중점과제(시그니처)

1. (RE100)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사회 구현
2. (에너지전환) 석탄과 원전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그린에너지로의 전환
3. (저탄소산업)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혁신산업으로의 탄소중립 전환
4. (녹색금융) 배출권거래제 수익금의 선순환 및 국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확대
5. (내연차) 신규 내연기관차 조기 퇴출
6. (녹색건축물) 민간의 신축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7. (농업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염해간척지 태양광 정책 조정
8.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및 脫플라스틱 활성화
9. (노동전환) 공정한 산업·노동전환 지원체계 법제화
10. (상생협력)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인 상생 촉진 정책 활성화